

내일신문·문화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문화정책 중간평가' ②

“예술 전문기관들, 길을 잃다”

인사 지체·통폐합에 ‘전문성’ ‘자율성’ 약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연극제와 ‘갈등’

- 글 쓰는 순서
- 1.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은 어디로 갔나
- 2. 예술의 위기, 예술 전문기관의 몰락
- 3. 창조 없는 창조경제, 언제까지 한류만
- 4. 철학도 전문성도 없는 문화복지
- 5. 문화정책은 국가 아닌 행복한 삶 위한 것

문화예술계를 지원, 보다 풍성한 예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이끌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예술 전문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술 전문기관들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경제 논리를 앞세운 ‘통폐합’ 논란이 이어지면서 해당 기관들이 ‘힘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연극제 집행위 ‘삭발 시위’ = 최근 예술 전문기관의 사업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안전 점검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서울연극제에 ‘극장 폐쇄’를 통보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다. 대관이 예정돼 있던 아르코예술극장의 폐쇄로 서울연극제의 일부 연극들은 장소를 바꿔 무대에 올려졌

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극장 폐쇄를 서울연극제 개막 하루 전날 공문으로 통보해 연극인들의 반발을 샀다.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삭발 시위에 이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까지 한 상태다. 안전을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계의 지원을 위해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우리나라 연극계의 큰 축 중 하나인 서울연극제와 대립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진세 연극평론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일을 풀어야 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올해 초 영화진흥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를 두고 논란이 됐다. 영화제에서의 등급분류 면제추천제도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영화제나 시민단체의 상영회 등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 대부분의 영화제가 이 제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들을 상영해 왔으나 올해 1월 ‘으랏차차 독립영화’라는 상영회에서 일부 영화들이 등급분류면제를 받지 못해 상영되지 못하면서 영화계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

유’ 침해 등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당 상영회의 행정실수로 인해 등급분류 면제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성 없는 ‘기관장’에 힘 잃어 = 예술 전문기관들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 ‘인사 지체’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전문성이 약한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산하기관들의 전문성은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예술 전문기관 역할을 해야 할 문체부 산하기관들 중 상당수가 ‘인사’로 인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또 몇몇 산하기관들의 경우 후임 기관장이 선임되기 이전까지 전임 기관장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몇 달 씩 기관을 이끌고 나가면서 일처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여기에 문체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태도도 문제되고 있다. 문체부와 현장 사이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행업자’ 수준으로 대한다는 것. 2013년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갑질’로 불의를 빚은 것은 단적인 사례다. 때문에 예술 전문기관들이 ‘자율성’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문체부와외의 관계에 대해 “우리 기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갑질’ 논란은) 예전 일”이라면서 “산하기관들과 협조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논리로 계속되는 ‘통폐합’ =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예술 전문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뜰이나 위축돼 있는 예술 전문기관들이 사업 목적이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통폐합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인다는 주장이다.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경우 이달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연극계는 통합되는 두 단체가 ‘연극’이라는 범주에 있다는 것 외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동예술극장



의 경우 ‘중장년층 관객을 위한 극장’으로 특화, 자리잡아왔다.

2014년에는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예술자료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통합됐다. 이 통합은 두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분리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이 외에도 몇몇 기관들의 통폐합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선 경제적 시너지 효과만 말할 뿐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등은 중시되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당장 국립극단과 통합, 운영되는 명동예술극장에는 어떤 공연을 올릴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경우 ‘통폐합’ 등 예술 전문기관의 정부에 대한 ‘중속화’가 계속되면서 지원사업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로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데 문화정책이 퇴행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

정의 경우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문체부는 다양한 산하기관을 두고 문화예술 현장과 소통하기 때문에 예술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체부의 경우 대한민국예술원, 해외문화홍보원 등 17개 소속기관과 30여 개 주요 산하기관을 두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문화’라는 분야가 넓고 각 영역마다 전문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예술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셈이다.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2005년 민간자율기구로 전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통해 순수예술 등의 창작지원,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사업, 예술기부, 국제 교류 사업 등을 총괄한다.

2005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제도적으로 시작한 첫 해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인력 양성 등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대외협력 사업 등을 수행한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 정책

“올해가 지나면 더 나빠지겠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정부의 지원사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 작업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예술 전문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해 예술가를 지원하던 세부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술 분야의 경우 예술가들은 1년 단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창작지원 기금을 신청,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각종 지역 문화재단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한다. 그런데 최근엔 해가 갈수록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를 졸업한 후 20여년 동안 각종 미술 작업을 해 온 A씨는 “올해가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요즘엔 ‘올

해가 지나면 더 나빠지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요즘 미술계에 뛰어들 20대들은 나빠지는 것만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은 “지원금을 나누주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콘텐트진흥원에서 했던 한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유명해진 음악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문학 및 연극분야 등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진세 연극평론가는 “이런 작

품이 선정됐는지 공유함으로써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럴 기회를 놓치는 셈이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눈치보기식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 전문기관의 통폐합도 문화예술인들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기관이 합쳐질 때마다 전문성을 지닌 세부적인 정책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평이다. 정 평론가는 “국립예술자료원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독립, 아심차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통폐합되면서 기관 안에 속한 하나의 부서로 전락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할 때와는 달리 중요성을 인정받

지 못하고 조직 안에서 주변부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술가들을 도와 관료들과 예술가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던 예술행정자들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평론가는 “젊은 예술가들의 경우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고 사업에 반영해 주던 젊은 예술행정자들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아쉬울 것”이라면서 “예술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의견에 대해 “문예진흥기금이 곧 고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재원을 늘리는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예술정책 해외사례

배워야 할 것은 키워드가 아닌 ‘기본기’

지금 한국의 예술계에서 ‘해외사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예술교육, 도시재생,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 장소 특정적 예술 등 지난 10여년 사이 해외 사례들은 너무나 빨리, 많이 수입되어 어지럼증을 낳을 정도다. 예술행정자의 키워드란 본다면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예술정책 선진국임에 분명하다. 문제는 그 화려한 예술행정의 용어가 실제로 작동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을 둘러싼 제도들, 해외사례들의 ‘네이밍(이름)’은 직수입되었지만 그 실제와 맥락 그리고 태도는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시카고의 ‘갤러리37’은 시혜적인 장애인복지가 아닌 예술의 가치 자체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창조성과 예술할 권리를 지원한다.

요코하마의 ‘뱅크아트’는 도시의 역사적 건물이나 시설 등을 예술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뱅크아트의 사례는 친숙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요코하마가 지속하고 있는 ‘지역의 창의적인 주체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지원’이라는 기본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요코하마 도시정부는 뱅크아트를 비롯하여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우토쿠 온카이’라는 창조활동의 거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예술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다. 그 피해는 지금은 예술정책의 실패 정도로 드러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의 삶의 정체성과 가치를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예술이란 인간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상상하며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인류의 오래된 생활태도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가치를 발휘한다.

주하고 활동하는 도시가 바로 창조도시’라는 상식을 조용하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지 않으면 예술계의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킨 한국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사례는 바로 베를린의 ‘우파 파브릭(Ufa Fabric)’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예술공간이 된 우파 파브릭은 1979년 젊은 예술가들이 낡은 영화 촬영소를 점거한 후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온 공간이다. 독일 정부는 우파 파브릭에 어떠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예술감사 자격증도 공급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장기적인 공간 사용을 보장했다.

그 결과 우파 파브릭은 지역 내의 문화, 예술은 물론 교육, 건강, 가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공동체지원센터(NUSZ)’를 만들어냈다. 이제 우파 파브릭은 이웃을 위한 사회적 솔루션은 물론 청년, 예술가들의 일자리까지 직접 창출하고 있으며, 그 일자리는 관료들을 위한 숫자놀음이 아닌 지역과 이웃을 위한 대안적이고 자립적인 삶의 형태이다.

시카고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시카고문화센터 1층의 ‘갤러리

37’은 장애인들을 위한 미술공간이다. 그 위치에서부터 한국의 요란하지만 실속 없는 장애인 예술지원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시카고 도시정부와 시카고 미술대학이 30년 가까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37’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장애인들의 체험을 강요하는 한국의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갤러리37’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온워드(Project Onward)’는 미술분야 취업 교육과 미술치료에 기반하여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전문 미술가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둘러싼 알팍한 수혜나 향수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삶의 ‘기회’와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기고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 되어버린 예술정책

최근 권영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야죠. 가능성을 보여 줘야 문화융성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도 “젊은이들이 스스로 제 값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얼마를 주지 않으면 출연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계약서에 써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 대표들이 예술을 둘러싼 노동 환경과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대해 언론에서 언급할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삶은 척박하고, 절박하다.

두 대표는 예술을 둘러싼 가치와 노동 그리고 권리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작 예술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조차 예술정책의 방향을 잡

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의 예술정책과 예술지원사업을 기획하고 협의하는 ‘위원회’로 전환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일지 달창구’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예술을 둘러싼 중장기적 전망,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합의, 새로운 예술을 둘러싼 상생적 등에 대한 기대는 실종된 지 오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예술계의 오랜 노력의 산물인 예술인복지법을 계기로 호기롭게 설립되었지만,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퍼 갑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에 대한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단기적인 긴급지원사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업만 남아버린 것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대다수의 문화예술 전문기관들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문화융성’ ‘창조경제’만 떠들다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실증시켰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안에서는 역망 있는 내부 전문 인력들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 없이 성과주의 행정의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고, 밖에서는 단절된 소통과 거버넌스 속에서 예술행정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에 익숙해지고 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예술정책이 실종된 것은 특정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조차 지난 2004년 21세기기를 준비하는 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인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새 예술정책)을 발표한 이후 예술에 대한 국가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버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하며 예술계에 희망을 던졌지만, 그것은 문화나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을 활용해서 경제적 소득을 높이자”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예술은 자신의 미래를 찾지 못한 채 국민의 삶과 예술의 창의성과는 무관하게 비명횡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예술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다. 그 피해는 지금은 예술정책의 실패 정도로 드러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의 삶의 정체성과 가치를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예술이란 인간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상상하며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인류의 오래된 생활태도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가치를 발휘한다.